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연구위원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국제적 경제 질서의 확립과 이를 위한 체계적 정책 조율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1944년 44개국 대표가 모여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를 출범시키고 다자주의적 세계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때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자유 무역 기조 확립을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및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가 창설되었는데, 이중 GATT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치면서 분야 확대 및 정책의 효율성과 구속력 강화를 위해 1995년 오늘날의 WTO(세계무역기구)로 대체되었다.

GATT와 WTO 체제를 거치면서 국제 무역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1940년도에 40%에 달하던 평균 관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5%에 도달하였으며, 회원국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64개국이 WTO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 경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전후 이러한 전 세계적 무역자유화의 큰 흐름 한가운데에는 늘 미국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회원국 수 급증으로 다자주의적 협정 체결이 지지부진해 지고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던 지위가 점차 잠식되어 가자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연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는 등 FTA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전 세계적 지역 경제 협정 체결 움직임을 가속화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전후 국제 무역 질서 및 전 세계적 자유무역 확대를 주도해온 미국이 작년 말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보호무역주의로 급선회하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 운동 기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NAFTA 및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었는데 현재 실제로 공약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지지기반으로 당선되어 미 제조업 부흥을 강력히 표방하며 보호무역과 미 제조기업 회귀 및 공장 증설 등을 통한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강제하다시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실제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그동안 정작 미국 내에서는 아이폰을 전혀 생산하지 않던 애플의 경우 중국에 상주한 위탁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 분업이 세분화되어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얽히고설킨 오늘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아이폰이 창출할 수 있는 고용효과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애플 제품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연구, 조사한 논문(Kraemer et al., 2011)에 따르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한 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선적되면 229-275 달러가 중국의 대미 수출액으로 잡히지만 이중 실제로 중국 근로자 임금 등으로 지불되는 비용은 10달러 미만으로 중국 조립공장의 미국 이전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얼마 전 애플은 아이폰 한 대를 11초에 완전 분해하는 재활용 로봇 ‘리암(Liam)’을 공개 했는데, 미국의 높은 인건비를 감안했을 때 애플이 미국에 생산라인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로봇에 의한 자동화 생산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한미 양국은 1, 2차 공동위원회 회담을 거쳐 결국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개정 협상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한미 FTA 재협상을 줄곧 요구하여 왔는데, 앞서 애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역수지 증감에만 초점을 맞춘 논의가 과연 미국에게 어느 정도의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경우 기술진보 효과에 따른 생산성 증대, 소비자 후생 효과는 물론 무역수지 효과에 있어서도 한국 보다는 오히려 미국 측에 더 득이 되는 협정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반 통상 압박 기저에는 러스트 벨트 지지기반 결속 및 중국과의 패권다툼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 한 가운데 놓인 한국의 경우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정부와 산학연이 중지를 모아 전략적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